

##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의 주요 경제정책과 평가

### 1. 프랑스 대선 결과

#### □ 2012년 5월 6일 올랑드 대통령 당선

- 2012년 5월 6일 결선(2차) 투표(투표율: 80.3%) 결과, 사회당의 올랑드 후보(57세)가 51.6%를 획득하여 48.4%에 그친 사르코지 대통령을 누르고 24대 대통령에 당선됨.
  - 올랑드 사회당 후보는 서민 위주의 경제공약이 효력을 발휘하며 서민층의 지지를 받아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 임기(1981~1995년) 만료 이후 17년<sup>1)</sup> 만에 처음으로 좌파 대통령으로 당선됨.
- 이번 프랑스 대선은 경제위기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채 긴축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사르코지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.
- 2012년 4월 22일에 실시된 대선 1차 투표(투표율: 79.5%)에서 중도 좌파 성향의 프랑수아 올랑드<sup>2)</sup> 사회당 후보가 28.6%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함. 중도우파 성향의 사르코지 대통령(대중운동연합)은 27.2%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하면서 올랑드 후보와 함께 결선 투표에 진출함.
  - 대선 1차 투표에서 마린 르펜 후보(국민전선)와 장-뤽 멜랑송 후보(좌파전선)는 각각 17.9% 및 11.1%를 득표하여 3, 4위를 차지하였으며, 프랑수아 바이루 후보(민주운동)는 9.1%에 그침.

1) 사르코지 대통령 임기 이전에 우파인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이 12년 동안 재임함.

2) 프랑스 제5공화국의 유일한 좌파 대통령이었던 미테랑 정부 시절 경제보좌관을 역임했고, 판사, 변호사, 교수를 거쳐 1997년부터 2008년까지 11년간 사회당 대표를 역임함.



## 2. 올랑드 대통령의 주요 경제정책

- 올랑드 대통령은 기존 긴축정책에서 탈피하여 경기부양 등 성장을 강조하는 경제정책 기조를 제시하고 있으며, '증세 및 재정지출 확대'를 통한 소득분배 형평성 강화, 금융산업·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강조함.
- 선거 공약에는 연 100만 유로 이상 소득자에 대한 75%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부자 증세, 교사 6만명 신규 채용, 62세로 연장된 정년의 60세 환원 등의 정책이 포함됨.

### □ 유로존에 대한 정책: 신 재정협약 등 긴축정책의 수정

- 긴축을 강조한 유로존 신 재정협약<sup>3)</sup>으로는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재협상을 역설함. 그러나 신 재정협약의 큰 틀은 유지하되, 성장협약을 부속 문서로 첨부하는 방식 등 성장정책 조항을 포함시킬 계획임.
- ECB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이라는 1차 목표 외에 국채 매입 등을 통한 경기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그 역할의 재정립을 요구할 계획이며, 경제성장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유로존 공동채권 발행 등의 재원 확보방안을 제기함.

### □ 재정정책: 고소득층,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세입 증대

- 재정건전성을 위해 법인세율<sup>4)</sup>을 인상하고, 연소득 100만 유로 초과분에 대해 75%의 소득세율<sup>5)</sup>을 적용할 방침임.
-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하는 정부채무를 축소하여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7년 말에 GDP의 80% 수준(2011년 말 86%)으로 관리하고,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2013년 3%로 억제하여 2017년 말 균형재정을 달성할 계획임.

3)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%를 초과할 경우 신재정협약에 의해 EU 차원에서 제재를 가함.

4) 현행: 대기업 33.3%, 중소기업 15% ⇒ 변경: 대기업 35%, 중소기업 30%, 중소기업 15%

5) 연소득 15만 유로 이상에 대해서는 현행 41% 대신 45%의 세율 적용



□ 금융정책: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

-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고, 신생기업을 제외한 여타 기업의 스톡옵션을 금지할 계획임. 또한 금융거래세를 신설하고 은행 수수료의 법정 한도를 설정하여 수수료를 인하하고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.

□ 산업정책: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, 국내 투자 진작

-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공공투자은행<sup>6)</sup>을 설립하고, 중소·혁신기업 지원용 비과세 정책예금 제도를 신설할 계획임.
- 해외 이전 기업에 대해 기존 정부지원금을 회수하고, 대기업과 정부간 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이전 공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함.

□ 사회정책: 일자리 창출 등

- 2017년까지 교원 6만 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청년층 일자리 15만 개와 중장년층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여 10%에 달하는 실업률 하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.
  - 청년, 여성 및 미숙련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5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고용현황 및 노동조건에 대한 연례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함.
- 주택정책으로는 임대료 급등지역에 임대료 상한 규제를 도입하고, 향후 5년간 저소득층 등을 위해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임. 또한 사르코지 대통령의 연금정책을 수정해 연금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0세로 환원함.

### 3. 올랑드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

□ 경제안정화 및 경제성장 노력은 긍정적인 평가

-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축정책에서 탈피하여 경기부양 등을 통해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올랑드 대통령의 경제 정책 추진방향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됨.

6) 예금공탁금고(CDC), 전략투자기금(FSI) 등 기존 공적금융기관을 공공투자은행으로 재편성



- 재정건전화와 경제성장의 동시 달성을 위해서는 근로·투자 유인 강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수적임.

□ 경제성장률 목표 및 재정건전화 계획은 회의적인 평가

- 올랑드의 목표성장률(2.0~2.5%)이 잠재성장률(1.5~1.7%)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으며 2017년 균형재정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평가됨.
  - 올랑드의 고용확대 정책이 정부지출을 수반하는 일시적 고용 확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럽 재정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프랑스 경제가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.

□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제시 미흡

- 중소기업 정책의 경우 자금지원 강화에만 편중되어 있고, 중소기업 전용 공공투자은행 등의 정책들도 이미 비슷한 형태로 시행 중인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 불과함.
  - 연금개혁 후퇴, 노동유연성 약화, 반 기업 정책 등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공약의 수정·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.

【김 찬 수】